



지난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전라북도의 국정과제 간담회에 김승일 행정부지사와 소순창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정과제 추진 개선방안 논의

## 전북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와 간담회

전북도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4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책기획위원회 소순창 분권발전 분과위원장 등 위원 7명과 도 김승일 행정부지사, 실국장 및 전북연구원장, 시군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의 내용을 관리 조정하고 국가 발전전략 수립, 주요정책 현안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직속 지원위원회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북, 경남,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전북을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와 연관된 전라북도 16개 중점사업에 대한 애로 및 건의를 했다.

전북도는 16개 중점사업에 포함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 가야사연

구 복원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한 참석자는 "국가 사업임에도 사업대상지가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방비 매칭, 운영비 분담 등을 지역에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국정과제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서 "지역에서 분권에 대한 관심, 특히 재정분권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도록 균형배분을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도 이어졌다.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지역에서도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하며, "국정과제와 연계된 전북의 중점사업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 1면에 이어... 자광 측 대한망직 부지 절차 무시한 일방통행

그러나 도와 시 등 행정기관은 머리를 내지 못했다.

담장 설치의 도유지를 무단 점·사용하는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담장을 설치하려면 관련 사업 절차부터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자광은 지난 5일 대한망직 부지 내 도유지 대부계약을 전주시와 체결했다.

도유지 사용목적은 '부지 내 기존 건물과 공작물 유지관리'다. 말 그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대부계약서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따라서 자광 측의 부지 내 건물 해체나 땅 파기 등 개발행위가 일질 금지된다.

대한망직 부지 중 6,228㎡(2.7%)에 해당하는 전북도유지 처리 문제가

개발 시기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 핵심으로 부각됐다.

도유지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는 상당히 까다로운 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도유지 사용은 관련 법상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이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 맞춰 추진토록 돼있다.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해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 계획으로 5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을 이어 받은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 관리목적에 따라 수개 필지를 한 단위로 설정해 개발하는 계획이다.

1차 도시기본계획은 전북도 승인이 있어야 하고 2차 도시관리계획과 3차 지구단위계획은 전주시 결정, 고시로 마무리 된다.

결국 대한망직 부지는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순서를 거쳐야 비로소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광 측 입장에서선 도유지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광 측은 지난 10월11일 도유지 사용신청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을 주민제안 형식으로 전주시에 신청했다.

시는 절차를 지키라며 이를 반려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단체들은 "(자광 측이)선행해야 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순서를 건너뛰는 것 아니냐"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고민형 기자

## '전북 출신'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임명

### 문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일재(58)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을 임명했다.

임 신임 상임위원은 전북도 순창 출신으로 숭실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정책학 석사를 거쳐 가천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사회정책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행안부 행정혁신기획관·정책기획관, 안전행정부 인사기획관, 전북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한 인사·행정기획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디지털 정부혁신을 이끌며 '정부24', '문서24', 행정정보공유 플랫폼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 소속 7명의 차관을 새로 임명하고, 또 국무조정실 제2차장과 조달청장 등 처·청장·위원장 차관급 9명의 인사도 함께 단행해 총 16명에 이르는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들 중 5명이 호남출신이다. /김진성 기자

## 靑, 특감반원 쇄신안 발표

### 명칭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파견기관 다양화

청와대는 14일 비위 논란이 불거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한다.

또 내부 상호 견제 강화를 위한 파견기관 다양화를 골자로 하는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명의로 나온 쇄신안에 따르면, 지난 5일 이번 비위 논란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조 수석은 이를 뒤인 7일 쇄신안을 마련해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쇄신안에 따르면, 먼저 비위가 불거진 '특별감찰반'은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라는 판단에서다. 조 수석은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해, 새로운 명칭에 맞게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오는 18일 국무회의의 상정 예정

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감찰반 구성 다양화를 통해 내부 상호 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 하겠다"며 "또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를 제정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 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거부에 따른 불이익 금지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이번 비위 사태와 관련해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

###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유죄...사상 첫 방송법 처벌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59·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첫 위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지난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21일 김진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 기부자 명단**

**<고창>**  
공음면 선동마을 120000  
공음면 청천마을 60000  
공음면 구수마을 160000  
공음면 장동마을 150000  
공음면 평산마을 140000  
(12월 17일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